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우리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공학적 구도가 형성된 건 13대 대선 때 부터다. 유력 후보자의 단일화 내지 삼각관계로 인한 표의 결집과 분산 등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때부터 3자레나 과란을 몰고 왔다.

속 풍토중 의원과의 단일화라는 데 있다. 선거 하루 전 단일화가 과거와 같지만 노 후보의 지지율이 부동의 이 후보를 넘어선 데는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있었다.

1987년 대선 직선제 도입 이후 정치권의 정설처럼 굳어진 '비슷한 세력끼리는 반드시 연대해야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단일화, 호남에 해법 있다

박근혜와 양자대결 불가피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평생의 한을 풀게 된 것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과 이인제 후보의 출마에 있었다. DJP 연합은 충청권 표를 끌어들이고, 여당을 탈당한 이 후보는 친여·보수성향의 표를 가져가면서 19.2%나 득표를 했다.

2002년 노무현과 이회창의 양자 대결에서 노 후보가 신승을 거둔 것 역시 무소

의 '3자 필패(필승)론'이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여김이 없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3각 구도 속에 각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문-안의 단일화를 통한 박 후보와의 양자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건 주자의 사실이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3자의 지지율 격차를 보더라도 대선판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아권 단일화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정치권의 혁신과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여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진통 없는 고지점이란 게 가당한 일인가.

유력 후보의 단일화는 도박과도 같다.

결린 판돈이 크고 '모 아니면 도'의 단순 승부게임이어서 중독성도 강하다. 자연히 구경꾼들이 몰리기 마련이다. 현재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에 정면 대결이 성사된다면 대선의 분신을 방불케 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게 자명하다.

그러나 안 후보가 제시한 정치권의 혁신과 국민적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1차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변화를 갈구할 자세와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벌써 단기의 지지율에 취해 안주를 피하고, 단순히 안철수 카드를 활용해 대선 승리라는 공학에 골몰하려는 모습마저 여보이기 때문이

다. 거기에선 승리를 낙관하며 해신은커녕 온갖 퇴행을 반복하다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그림자만이 어른거린다.

민주당은 57년 전통의 제1 야당이자, 의원만 128명에 달한다. 그런 정당이 왜 장외(場外)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됐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안 후보가 던진 '공'이 그러한 면에서 의미심장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안철수 변수'에 따른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단일화 논의에 대응을 채우는 일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논의에 깊숙이 참

여했고, 육도 많이 먹었던 김민석 전 의원이 최근 이런 말을 했다. "정치 공학은 중요하지만 민심이 더 근본이다. 나의 뼈아픈 체험적 결론이다."

차선은 지지율 몰아주기

대선에선 흔히 시대정신을 점한 쪽이 승리한다고 한다. 인물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한 면에서 정당개혁,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나 다름이 없다. 문재인 후보가 당의 쇄신과 변화를 통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은 이제 대세이자, 호남사람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민의 58.4%, 호남의 78.2%가 단일화를 희망하고, 여기에 호남사람들이 안 후보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정치개혁과 함께 단일화에 대한 열망 탓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목은 때를 잊어내지 못하고 두 후보간에 힘겨투기로 인해 성사가 불투명해진다던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지지율 몰아주기를 통해서라도 단일화를 꾀해야 한다. 한쪽으로 지지율이 쏠리면 다른 쪽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不動)의 지지층인 호남사람들이 먼저 나서자. 호남 표심이 지지율을 더하고, 그게 곧 단일화로 이뤄질 테니까. 영남 출신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도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던가.

(이사·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시설

진도지역 '간암 집단발병' 규명 시급하다

진도군에서 '간암 집단발병'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진도의 간암 발생률은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치보다 40~60% 이상 높은 수치인데다 유력한 원인인 C형간염 항체 양성률도 타지역의 5~10배에 달해 심히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9~2008년 진도군 인구 10만 명당 간암 발생률은 남성이 71.7명, 여성이 18.8명으로 전남 남성 평균 59.7명, 여성 13.3명보다 40~60% 더 높았고 간암 사망률(남 73.2, 여 18.4명)도 전남 평균에 비해 60%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남 46.5, 여 12.3명)이나 인근 중국(남 42.5, 여 11.3명), 일본(남 39.8, 여 11.9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보건당국이 2008~2009년 진도 주민의 간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다른 지역 1%대의 5~10배에 이르는 점도 확

인했다. 문제는 유력한 원인인 C형간염 때문인 것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이는 실마리에 불과할 뿐 정확한 원인이나 발병률이 높은 이유, 감염 경로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C형간염 또한 B형 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고 효과가 좋은 신약도 없다. 항바이러스제를 약으로 쓰지만 부작용도 심한 편이다. 게다가 C형간염의 원인 규명이 1차 응역조사가 마무리되는 3년 후나 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C형간염 또한 B형 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고 효과가 좋은 신약도 없다. 항바이러스제를 약으로 쓰지만 부작용도 심한 편이다. 게다가 C형간염의 원인 규명이 1차 응역조사가 마무리되는 3년 후나 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공기업 '돈 먹는 하마'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방공기업의 빛이 가계부채에 이어 제2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공기업 부채도 1조3474억 원에 달해 연간 이자만 1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민들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걱정이 앞설 뿐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공기업 부채는 7423억 원, 전남도는 6031억 원으로, 4년 전인 2007년도에 각각 160.4%와 252.4%나 증가했다.

문제는 양시도의 공기업 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공기업 부채는 2008년 4801억 원, 2009년 7468억 원, 2010년 7060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7423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남도 공기업 부채 역시 2008년 2865억 원, 2009년 4218억 원, 2010년 5372억 원, 지난해 6031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는 지방정부

에서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들이 체면발행을 늘리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왔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가 떠맡을 수밖에 없어 결국 시민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또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기업 설립하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없다. 지자체 형편은 '돈잔치'나 즐길 상황이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곳이 수도룩하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채 증가는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며, 전문 경영시스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거덜날 수밖에 없다.



김병인

최근 동북아 한중일 삼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일 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어 독도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일 간에는 일본이 조여도도를 국유화하면서 중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에 영토라고 우기면서 주장하는 것이 국제법에 의거한 '선점'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1905년 1월 각의 결결과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다케시마(독

한·중·일 갈등 근원은 일본의 침략역사 왜곡

도의 일본령)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제법에 의하면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이어야 한다. 그러나 독도는 자고이래로 무주지가 아니고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울릉도, 독도를 점령하여 신라 영토에 편입시킨 이래 줄곧 한국 영토였다.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현재 울릉군) 관할로 명기했던 한국의 영토이다.

일본 측 자료로도 근대의 일본 교과서, 해군 지도 등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가? 역사적 사실이 나 각종 자료를 보아도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기 전에 독도는 의심할 여지없는 한국 땅이었다.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은 사실은 강탈이다. 러일전쟁 직후에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의 일본 편입 사실

을 국제적으로 알리지 않고 겨우 현청 앞에 고시해 놓고 이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은 일본의 침략역사의 왜곡이다. 독도나 조여도 모두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불법 침략에 의해 갈탈한 것이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주라고 선언했고, 일본이 수용했으니 독도는 한국 땅이 분명한 것이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아베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고노 담화 대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A급 전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총리 재임 시절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이라고 했다. 이런 인사가 집권당 총재로 선출되고 다음 총선에서 총리가 유력하다면 동북아 국제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전후에 독일은 과거를 반성하고 배상함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었지만, 일본은 배상에는 소홀하고 시종 일관 역사를 부인해왔다. 이것이 오늘날 동북아 영토 문제의 근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모두 인류 정의를 어긋내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민족이라면 잘못된 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에 나서기 바란다.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고

남해안시대 대비 최우선 과제는 물 확보



정재성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미래니업 프로젝트'는 2011년 세계미래학회에서 'UN 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하 수면의 하강과 수자원 고갈 문제로 '피크 오일'(Peak Oil =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가 특정 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유사한 '피크 워터'(Peak Water)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지구상 곳곳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대형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현재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56년만의 최악의 가뭄

로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고, 물부족으로 곡물가격이 연일 치솟는 한편 필리핀은 홍수발생으로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불과 수 시간 만에 월평균 강우량의 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총 144명이 사망하고 1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2010년 8월에 섬진강 상류유역에 18시간 동안 500mm 빈도에 해당하는 251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섬진강변의 안전을 위협했다. 또한 2011년 9월 중부지방에서는 춘천시 기상관측 이래 월 강우량 최대치인 933mm가 쏟아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올 6월까지 우리나라는 104년 만에 최악의 수준의 봄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곳곳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홍수기에는 여수 308.9mm(8월 24일)로 관측 이후 최대호우가 발생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후회해를 겪어야만 했다.

연 강수량의 증가보다 강수량의 홍수기

집중도가 더 크게 증가해 홍수와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재해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와 기후와 지형이 비슷한 일본은 민주당 정권의 핵심공약이었던 '안바람' 건설중단을 철회하고 공사를 재개기로 결정했으며, 5개 댐에 대한 건립실 재계를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치수사업에 대한 경제성(B/C) 검토를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 56년만의 최악의 가뭄에 대한 대응책으로 향후 충분한 용수공급을 약속했다. 태국은 2011년 국토 70%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117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용수 확보와 치수능력 증대를 노력하고 있지만, 섬진강 남해안계인 전남동부지역에서 시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 기존 저수지 독 높이

기, 지하수개발 등 상수도시설 확충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 가뭄이 지속되면 소규모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원이 고갈돼 이러한 일시적 대응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해양 엑스포를 개최한 전남 동부지역은 도로, 항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고 산업단지 확장,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남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발전에 상응한 수자원 확보이다.

불확실한 이상기후에 대응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투자를 통한 한시적 발전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지역이 현재는 맑고 깨끗한 섬진강물을 쓰고 있지만 전남도 종합 발전계획,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정부계획에 따르면 머지않은 장래에 전남 동부지역도 심각한 물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남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순천대 토목공학과 교수)

無等鼓

신화와 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일부 종교의 경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신화의 미신적인 색채가 상당부분 지워졌거나 또는 흐릿해졌지만,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득한 신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를 합리적인 지성인으로 여기는 지식인들은 거부감을 보이지만, 태고적부터 전해오는 일부 신화와 몇몇 고대 종교에는 외계인 등 지구 밖 세계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멕시코 마야문명의 신 케찰코아틀은 '하늘을 나는 뱀'으로 묘사되며, 페르시아의 벽화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아후라마즈다'가 우주

선이 연상되는 작록용 다리를 내민 기체에 탄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의 도곤 족은 시리우스성계(星系)에서 찾아온, 물고기와 닭은 '논도라'는 수목 양생생물에게서 지식을 전수받았다는 신화를 갖고 있다. 또, 3천년 전 이집트 왕 토트모스3세 시대의 파피루스에는 커다란 접시모양

을 한 '불의 채'가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며 1주일간 걸쳐 지상 근처에까지 하강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인도의 대서지위경거나 또는 흐릿해졌지만,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득한 신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를 합리적인 지성인으로 여기는 지식인들은 거부감을 보이지만, 태고적부터 전해오는 일부 신화와 몇몇 고대 종교에는 외계인 등 지구 밖 세계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멕시코 마야문명의 신 케찰코아틀은 '하늘을 나는 뱀'으로 묘사되며, 페르시아의 벽화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아후라마즈다'가 우주

선이 연상되는 작록용 다리를 내민 기체에 탄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의 도곤 족은 시리우스성계(星系)에서 찾아온, 물고기와 닭은 '논도라'는 수목 양생생물에게서 지식을 전수받았다는 신화를 갖고 있다. 또, 3천년 전 이집트 왕 토트모스3세 시대의 파피루스에는 커다란 접시모양

신화의 이면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양심불량 '폰테크족'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해야

개인사업을 위해 휴대폰을 2개를 사용한다. 당연히 휴대폰 사용료도 많이 나오지만, 업무나 사업 등의 일 때문에 휴대폰을 2개 혹은 서너 개씩 쓰는 사람들이 적잖은 걸로 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혹은 분실의 위험도 높다. 그래서 다시 사려면 단말기 값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요즘 소위 폰테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는다.

폰테크란 무엇인가. 휴대폰을 개통한 뒤 판매해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는 행위인데 방법은 간단하다.

공짜폰을 구입해 의무 약정 기간인 3개월간 사용하고 이를 해지한 뒤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경우 3개월 기본료, 해지 위약금을 제외하고도 1대당 평균 5만원 가량이 남는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3개월 만에 약 40~50만 원은 거뜬히 번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거짓으로 분실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월 3000원 가량만 내면 되는 보험에 가입한 터라 분실사고를 하자마자 새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 그 뒤 곧바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 주고 휴대폰 구매상에 10~2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새 휴대폰도 받고 20만 원의 돈도 챙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통해 돈을 벌이려는 폰테크족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불법이더라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동

통신사들도 앉아서 당하고, 양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동통신 3사가 공유했으면 한다. 분실 이든 해지든 이런 수법으로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그 인적사항을 기록해 3사가 공유한 뒤, 분실이나 해지가 일정 횟수가 넘으면 교체를 불허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만 폰테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